
한국의 해양안보와 국가경제

박응수* · 고광섭**

The Korea Maritime Security and National Economy

Eung-soo Park* · Kwang-soob Ko**

요 약

대한민국은 국가경제의 기반을 ‘해운을 통한 무역’에 두고 있는 ‘해양국가’이다. 한 나라의 국가경제의 특성을 나타내는 경제지표인 ‘무역의존도’를 보면 이를 쉽게 알 수 있는데, 세계은행(IBRD)의 자료의 2008년도 한국의 무역의존도는 83.5%로 일본 28.8%의 약 3배, 중국 68%에 비해서도 현저하게 높은 세계 최고수준이다. 이는 한국의 국가발전 나아가 안보가 무역의 기반이 되는 해양의 안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최근 소말리아 해적피해와 같은 사례에서 보듯이 한국의 해양안보의 위협이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은 해양안보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해양안보위협을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유사한 위협으로 간주하여 전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분산된 해양안보관련 기능을 유기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국제적인 해양안보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여 국가의 해양안보를 확고히 보장함으로써 한국의 지속적인 번영을 도모하여야 한다.

ABSTRACT

The Republic of Korea is the maritime country of which its infrastructure of the country's development is based on maritime trade. This can be easily understood according to degree of dependence upon foreign trade, which is the economic indicator for expressing one country's economic characteristics. In 2008, the degree of dependence upon foreign trade of Korea is 83.5%, and this figure is much higher than that of Japan and China, which is 28.8% and 68% respectively. This in turn means that the development of Korea, and also the security of Korea depends greatly on safety of the sea. On the other hand, there is a growing trend that threats to the maritime security of Korea increases as examples seen in Somalia pirates. Thus we could say that interest on this issue should increase and also measures to counter those threats should be prepared. Also Korea should take the maritime security as important as critical factors as national security, which is similar to military threats from North Korea. Therefore all citizen's interests on the issue should be raised, and organizations that are capable of mutually integrating the functions related to maritime security should be established. Finally, Korea should actively participate international efforts on maritime security, and secure maritime security of our nation therefore contribute to the nation's prosperity and future development.

키워드

해양안보, 무역의존도, 해양안보위협, 국가경제

Key word

maritime security, foreign trade dependency, maritime security threat, national economy

* 해군대학

** 해군사관학교 (교신저자)

접수일자 : 2009. 07. 20

심사완료일자 : 2009. 09. 07

I. 서 론

본 논문은 국가 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인 국제정치학(International Politics) 분야의 핵심 주제인 ‘안보(security)’를 연구함에 있어, 탈냉전이후 안보개념의 외연적 확대와 관련하여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는 ‘해양안보’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작성하였다.

1948년 국가수립당시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군에 포함되었던 한국이 건국한지 60여년 만에 세계 10대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것은 무엇보다도 ‘해양을 통한 무역주도의 국가경제 발전전략’에 힘입은 바 크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지형적으로 반도국가 이지만 북쪽으로는 진출이 사실상 막혀 있는 한국이 바다를 통해 국가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었던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국가의 해양활동 특히 해양을 통한 무역활동이 안전하게 보호·유지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2007년 현재 한국경제의 무역의존도(한 나라의 국민경제가 어느 정도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가를 표시하는 지표. 일반적으로 국민총생산(GDP)에 대한 수출입총액의 비율로 나타냄)는 75% [1]로서 그 추세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한국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해양을 통한 무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해양에서의 안보의 중요성도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현 정부는 출범 직후 국가의 비전을 ‘선진화를 통한 세계일류국가’로 설정 하였던 데 이 세계일류국가란 ‘일류의 시민의식과 문화, 일류의 과학기술과 산업을 통해 경제발전과 사회통합이 실현되는 나라’라고 규정 하였다.

이러한 국가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재와 같은 경제발전기조가 지속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경제발전은 한국이 현재와 같은 무역주도의 경제전략을 안정적으로 유지 할 때에 가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2006년 이후 소말리아근해에서 우리선박들(동원호, 마부노호, 브라이트 루비호 등)의 잇따른 해적 피해 사례와 같이 한국의 해양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들이 급격히 부상하고 있는 반면, 미국을 중심으로 비교적 안정을 유지해온 세계해양안보질서가 미국 국력의

상대적 약화로 지속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도 국가의 지속적인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 해양안보를 지키기 위한 관심과 노력이 절실한 시점에 와 있다고 볼 수 있는 반면에 이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 미흡은 미래 한국의 국가발전에 적지 않은 저해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국적 해양안보의 개념정립을 시도하고, 이를 기초로 한국의 해양안보의 실체를 해상무역을 중심으로 분석한 후, 한국의 해양안보 증진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보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였다.

II. 안보(security)의 일반적 개념과 한국의 해양안보 개념 논의

2.1 ‘안보’연구의 경향

안보 또는 국가안보라는 표현은 1947년 미국의 국가안전보장법(National security Act)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이 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군 및 정부 관계자들이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련된 사항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국내정치, 외교 및 군사정책을 종합적으로 대통령에게 조언하는 것을 임무로 했다 [2]. 한편 월퍼스(Wolfers)는 안보연구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의 논문 “National Security as an Ambiguous Symbol(1952)”에서 국가안보란 정확한 의미가 없으며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다른 의미를 나타내는 모호한 개념이라고 지적하였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의 개념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냉전체제 하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으며 일반적으로 국경 밖에서 도래하는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왔다. 그러나 냉전이 종식되어 동·서진영간 군사적 대결구도가 와해되자 국가안보의 개념은 군사적인 차원에서 정치, 경제, 사회, 환경 등의 비군사적인 차원으로 점차 넓어지고 있다. 또한 안보연구에 있어 국내정치적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특히 제3세계 국가들의 정치적불안정은 안보 위협이 외부로 터만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야기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냉전이 종식이 된 이후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국제정치적 사건 등(2001년 미국의 9.11 사건과 같은)에도 불구하고 안보에 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거나 그러한 근본적인 전환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아직까지 시기상조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4]. 즉 안보의 보편적 개념이 ‘가치(value)’와 이에 대한 ‘위협(threat)’이라는 기준에 의해 국제정치의 보편적 행위자인 국가를 중심으로 정의된다는 근본적 관점은 크게 변화되지는 않으리라 전망된다.

2.2 ‘안보’와 ‘국가안보’ 용어의 의미

안보에 관한 관점과 접근방법은 실로 다양하다. 이 개념에 대한 관점이 그만큼 다양한 이유는 아직까지 안보가 논란의 소지가 많은 개념이라는 사실 때문만이 아니라 국제정치를 보는 다양한 패러다임의 존재와 새로운 접근법의 지속적인 등장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안보는 개인 및 집단의 핵심가치(core values)에 대한 위협이 없는 상태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논의의 초점이 ‘개인’, ‘국가’, 혹은 ‘국제’안보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견해의 차이가 존재한다.

안보의 의미를 추적해 보면 안보(security)란 라틴어의 ‘securitas’에서 유래한 말이다. 여기서 ‘se’는 ~~으로부터 자유로운, 또는 ~~이 없는 상태란 의미의 접두어이며, ‘curitas’는 걱정, 근심, 불안울 의미하는 용어이다. 따라서 securitas 즉 security란 ‘걱정, 근심, 불안 등이 없는 상태(The state of being free from danger or injury, anxiety or fear)’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국가안보 즉 국가안전보장이란 일반적으로 “국가에 불안함이 없는 상태,” “국가의 안전이 보장된 상태” 또는 보다 적극적으로 “타국으로부터의 침략에 대하여 국가의 안전을 지키는 일(동아출판사, 1996)”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한편 국가의 안보를 보다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교육하는 한국의 국방대학교에서는 국가안보를 “정치, 외교, 사회, 문화, 경제, 과학기술 등 국가의 제 정책분야를 종합적으로 운용하여 국내외로부터 기인하는 군사, 비군사에 걸친 각종 각양의 직·간접적 위협을 억제·방지·배제하고, 유사시 적절히 대응하여 국가와 국가가 추구하는 제 가치를 보전하고 향상시키는 것(국방대학교, 2005.)”이라고 정의 하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 한바 있지만 국가안보는 원래 외부의 직접적인 위

협으로 국가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었다. 그러나 최근 국가의 활동영역이 확대되고, 일부 국가에서는 국내적 안보가 더욱 중요한 요소로 대두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국가안보를 논의함에 있어 단순히 외부로부터의 위협만을 고려해서는 안보를 온전하게 달성 할 수 없음을 인식하여 보다 포괄적이며 총체적인 의미의 안보 즉 포괄적 안보(Comprehensive security)라는 개념의 사용이 보편적인 추세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의 핵심주제인 ‘해양안보(Maritime security)’에 대해 그 개념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2.3 해양안보의 개념고찰과 한국에서의 해양안보 위협의 논의

가. 해양안보의 개념고찰

‘해양안보’란 위에서 언급한 ‘안보’ 또는 ‘국가안보 개념’과 관련하여 고찰 해 볼 수 있겠다.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이 용어가 ‘해양(Maritime)’이라는 전 세계의 공공 영역이라는 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개념이라는 사실이다. 즉 해양이란 국제법적으로 전 지구적인 활동영역으로서 영해를 제외하고는 특정국가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세계 모든 국가, 조직, 개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만인의 공공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해양안보(Maritime security)’란 이러한 공공의 영역인 해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안전 위협으로부터 국가나 개인이 자유로워지는 것 또는 그런 상태, 보다 적극적인 의미로는 해양에서 국가의 이익을 보호 및 증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과 앞에서 언급한 국가안보의 개념을 기초로 해양안보를 보편적 안보주체인 국가를 중심으로 정의해 본다면 “해양안보란 국가의 제반 해양활동에 위협을 주는 요소를 억제 또는 방지하고, 유사시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해양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나아가 국가이익을 보호 및 증진하는 제반 활동”이라 할 수 있겠다.

국가의 해양활동이란 나라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해양운송, 수산업, 항만 및 물류, 해저자원개발, 해양에너지개발, 해양관광 및 레저, 해양질서 유지활동 등을 들 수 있겠다. 이러한 해양안보의 개념은 국가안보의 일부분으로서 한국과 같이 해양활동이 국가생존과 직결된 국가에게는 매우 중요한 위

치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해양안보분야를 국가 기능 측면에서 본다면 군사적 기능과 경찰적 기능, 외교적 기능을 포괄하는 매우 광범위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성격의 해양안보는 국가 해양전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한나라의 해양전략(일반적으로 ‘해양전략(Maritime strategy)’이란 국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해양력의 제요소(해군력, 해운, 해양자원, 기지 및 해양관련 기관 등)를 효과적으로 조직하고 운영하는 술(術)과 과학을 말함)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분야이다.

여기에서 해양활동에 대한 위협을 든다면 평시에는 해적, 해상테러리즘, 해상교통로 주변국 간의 분쟁 또는 이러한 분쟁에 연루 되는 것, 도서영유권이나 어로 및 해양자원과 관련된 해양관할권 분쟁 등등이 있겠으며, 전 시에는 전쟁당사국의 해군력을 포함하는 군사력 및 그 군사력에 의한 각종 군사 활동 등이 있겠다. 여기에서 전 시의 해양안보문제는 엄밀하게 구분하기는 다소 무리가 따르겠지만 일반적인 의미의 국가안보분야로 분류할 수 있으므로 해양안보는 주로 평시 해양에서의 국가활동 중 경제 등 민간활동과 관련된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 생각한다. 국가안보와 해양안보의 영역이나 수준 등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나. 한국에서의 해양안보 위협의 논의

한국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경제의 무역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군에 속하는 해양국가로서 일반적인 해양안보위협에 대부분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평시 한국의 해양안보 위협요소로는 무역선이나 어선에 대한 해적행위나 해상테러리즘, 한국의 해상교통로가 통과하는 인도양, 말라카 해협 및 남중국해, 동중국해에서의 주변국간 분쟁 등이다. 이중 현재 가장 큰 위협을 주고 있는 것은 한국 국적선에 대한 해적행위라고 볼 수 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소재 국제해사국(IMB: International Maritime Bureau) 해적감시센터의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 해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해적행위는 1990년 이후 매월 평균 8건 이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특히 이러한 해적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장소가 한국의 주 수출입 통로인 말라카해협이나 인도양의 아덴만근해 라는 점은 한국의 입장에서 매우 위협적인 사안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의 해양수산부(현 국토해양부)는 1986년부터

2006년까지 한국국적선박이 입은 해적피해가 총 36건 이었다고 밝힌바 있으며, 2007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해적피해사태 263건 중 42%인 110건이 말라카 해협 등 아시아해역에서 발생하였다고 발표했다 [6].

최근에는 소말리아 인근 해역인 아덴만 등에서 해적출몰이 집중되어 한국을 위시한 일본, 중국해군이 소말리아 해역으로 파견되어 임무를 수행중이나 해적행위의 역사적 지속성이나 다양한 발생배경을 고려한다면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은 국가 간 해양분쟁으로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의 발표와 동시에 연안국의 해양에 대한 권한이 확대되면서 해양분쟁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남중국해의 남사군도 및 서사군도 해역은 태평양과 인도양을 연결하는 한국의 핵심항로로서 한국은 원유 수송의 70%이상을 이 해역을 통해 수급하고 있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해역이다.

남사군도에서의 국제 분쟁의 경우는 중국과 필리핀이 1988년과 1989년의 무력충돌을 통해 일부 압초를 점령하였고 서사군도의 경우 1974년 자유월남정세가 혼란한 틈을 이용 중국군이 무력으로 베트남군을 축출하고 도서를 점령하고 있다. 만에 하나 이러한 지역에서의 국지분쟁이 재발한다면 한국의 해상운송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III. 한국경제의 특징과 해양안보

다음은 한국경제와 해양안보와의 관련성에 대하여 고찰해 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경제가 얼마나 해양을 통한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가? 한국은 얼마나 많은 분야에서 해양을 이용하고 있으며, 해양을 통한 무역에 차질이 발생 시 어떤 영향을 어느 정도 받게 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의는 한국에서 ‘해양안보’의 개념정립과 연구의 필요성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3.1 한국경제의 무역 의존도

1950년 당시 최빈국의 수준으로 분류되었던 한국은 2008년 현재 GDP기준 세계 13번째의 경제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이 자원의 부족과 내수시장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세계적 수준의 경제적 위치를 확보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무역주도적 국가 경제발전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는 아래(표1)과 같이 1960년 이후 한국의 무역의존도 변화추이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7].

표 1. 한국경제의 무역의존도 변화 추이

Table 1. The tendency of dependence upon foreign trade of Korea

1960	1970	1980	1990	2004	2007
16.8	41.4	76.6	53.5	70.25	75.09

한편 주요 선진국들과 한국의 무역의존도를 비교해 보면 아래(표2)와 같이 한국의 무역의존도의 상대적 수준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규모가 큰 나라의 경제는 국내의 분업이 유리하므로 무역의존도가 낮은 반면,

소득수준이 높고 국가규모가 작은 국가의 경제는 무역의존도가 높으며 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 시 한국의 경우는 지나치게 높은 편이다 [8].

표 2. 2007년도 한국과 주요국가의 무역의존도 비교
Table 2. The comparison of dependence upon foreign trade between Korea and major Countries in 2007.

미국	일본	영국	중국	독일	한국
22.97	30.15	38.11	67.07	71.91	75.09

3.2 한국무역의 해양의존도

한국의 해양안보의 중요성과 관련 한국무역의 해양의존도를 2007년도 통계청홈페이지에서 발표한 자료(2009. 4. 11)를 기준으로 분석해 보자.

2007년도 한국의 무역액은 총 7,255억 달러였으며, 화물량은 554백 만톤이었다. 이중 우선 수입측면으로 화물량면에서 99.99%를 해운에, 0.01%를 항공에 의존하였으며, 수출측면에서는 화물량면에서 99.997%를 해운에, 0.003%를 항공에 의존하였다. 결론적으로 한국무역은 수출입 공히 물량기준 거의 100%(99.997%)를 해상운송에 의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금액면으로는 반도체와 같은 고부가가치의 물품이 항공기를 통해 수출되고 있기 때문에 약 74%정도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한국의 무역 나아가 한국경제가 절대적으로 해양안보에 영향을 받는 구조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통계라고 할 수 있겠다.

한편 국제해운수송량의 순위를 살펴보면(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4년 기준 한국은 미국과 일본의 약 2배, 독일 스웨덴과는 거의 유사한 수준의 수송량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화물을 해운에 의존하고 있는 전형적인 해운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국가임을 알 수 있다.

표 3. 2004년도 한국의 국제해운 수송량 비교 / 단위 : 천톤

Table 3. The comparison of international maritime transportation between Korea and major countries in 2004.

미국	일본	대만	스웨덴	독일	한국
885,599	988,000	910,347	1,991,096	1,853,244	1,854,419

※ 일본 자료는 수입량(494,187 천톤)고려 추정치

3.3 한국의 주요 수출입 물자의 수출입 현황 및 수송문제발생시 파급효과

먼저 관세청이 발표한 2007년도 기준 한국의 10대 수입품목을 살펴보면 아래(표4)와 같다 [9]. 이중 반도체 및 일부 컴퓨터 품목을 제외한다면 거의 100%를 해상운송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4. 2007년도 한국의 10대 수출입 품목
Table 4. The Korea's Major import and export list in 2007.

순위	1	2	3	4	5	6	7	8	9	10	
수입	품목	원유	반도체	천연가스	석유제품	철강판	컴퓨터	반도체제조장비	동계품	석탄	합금및고철
	구성비	18	8.5	3.9	3.1	2.9	2.6	2.3	1.8	1.7	1.7
수출	품목	반도체	자동차	통신기기	선박	석유제품	디스플레이	컴퓨터	합성수지	자동차부품	철강판
	구성비	10.5	10	8.2	7.5	6.4	4.6	3.7	3.5	3.4	3.3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한국 산업의 핵심물자인 원유나 천연가스, 석탄 및 철강제품 등의 수출입에 만에 하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이다. 사실상 무역에 국가의 사활을 걸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이러한 취약한 경제구조에 대해 많은 연구와 대비를 해 두어야 할 것인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최근 수출입물자의 산업연관분석에 관한 한 연구자료에서는 한국의 핵심 수입품목인 원유·천연가스·석탄의 수입차질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0년 기준 상기 수입품목의 수입차질시 발생할 수 있는 단순 생산유발손실액은 일일 1,283억 원, 60일차단시 7조6,980억 원이며 이에 부가하여 이로 인한 파급효과는 한국의 산업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즉 상기 원유나 천연가스, 그리고 석탄은 한국의 모든 산업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로서 원유 가격상승, 이로 인한 수입증가, 경상수지 악화, 물가상승 및 경기위축 등 국내 경제전반에 파급됨으로써 경제의 악순환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10].

실례로 1차 오일쇼크 발생 다음 연도인 1974년 연평균 원유가격은 1973년 대비 약 230%상승 하였는데 당시 세계경제의 불황으로 수출이 급감하여 경제성장률은 2년 연속 하락하였고 소비자 물가상승율도 1973년 3.5%에서 2년 연속 20%이상 급등하였다. 이러한 피해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특성상 앞으로도 얼마든지 재발될 수 있고 이러한 피해가 국가 위기의 원인이 될수 있다는 측면에서 평소부터 면밀한 분석과 치밀한 대비가 필요하다.

한편 이러한 수입차질로 인한 직접적인 파급효과에 부가하여 간접적 파급효과로는 취업파급효과와 물류파급효과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석탄의 경우 취업파급효과는 2003년 기준 일일 885명으로 집계되었으며 60일차단시 53,100명이었다(최용석, p.54.). 이러한 실업률은 사회안정확보 등 국가안전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다대하다는 의미에서 안보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물류측면에서는 2008년 6월 유가 급등으로 인한 화물연대의 파업 시 당시 관련 한 연구기관에서 파악한 피해액은 단 5일간이었지만 무려 4.7억 달러(약 6,500억원)로 추산되었다 [11]. 물론 이 액수는 국내에서 발생한 비교적 단순한 문제였으므로 국내경제 전반에 미친 영향은 치명적이지는 않았지만 한국경제의 기반이 얼마나

취약한 것인가를 인식케 하는 데는 충분한 의미가 있었던 사례였다.

IV. 한국의 해양안보 증진방안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국가(국민)의 안전과 경제적 번영이다. 이는 한국이라고 예외 일 수 없다. 먼저 국가의 안전과 관련하여 한국에 있어 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여러 방면에 걸쳐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으나 필자는 크게 두 가지라 생각한다. 하나는 북한으로 부터의 직접적인 군사위협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의 국가경제를 지탱하여 국가발전을 견인하고 있는 각종 해양활동에 가해지는 해양안보 위협이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는 전 국민적 위기의식과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그동안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중심으로 국가적 노력을 통해 잘 대비해 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중요성면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해양안보위협에 대해서는 실체가 명확하지 않고 아직까지는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준까지 발전한 사례가 없어 상대적으로 대비에 소홀한 점은 없었나 냉정하게 평가해 보아야 하겠다.

현재 날로 그 강도가 심해지고 있는 소말리아 해적의 예에서 보듯이 해양안보위협은 그 공간적 범위가 넓을 뿐만 아니라 위협의 종류도 매우 다양해 한국 단독으로 모든 위협에 대응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양안보에 대한 노력도 북한으로 부터의 위협에 대한 대응 수준에서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 생각한다. 한국의 해양안보증진방안에 대해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안보의 핵심인 '해양안보'에 대해 학술적 연구의 확대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해양안보에 대한 개념연구나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기술적, 사회적, 문화와 관련된 이론적/실제적 연구가 포함될 수 있다. 현재 전세계의 해양안보를 사실상 책임지고 있는 미국에서는 세계해양의 안보 증진을 위해 PSI(대양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와 같은 레짐(Regime)을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사례에서 보듯이 미국의 국제적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고, 반면 한국의 위상은 향상되고 있

는 시점에 한국이 언제까지나 이러한 미국의 질서유지 활동에 편승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 한다. 따라서 한국은 독자적으로 해양안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러한 시도의 하나가 본 연구이기도 하자.

둘째, 한국의 해양안보문제를 북한의 군사위협과 유사한 수준의 국가의 핵심안보문제로 인식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해양안보위협의 실체가 북한의 위협과 같이 분명하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지만 이에 대한 범국가적인 대비를 지금부터 해 두지 않으면 안 된다는 측면에서 제시하는 것이다. 특히 한국의 국가경제는 앞에서 충분히 언급한 바와 같이 성격상 대부분을 해양에 의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해양안보는 곧 국가안보라는 인식확산이 시급하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차원의 해양안보전략개념을 정립하여 관련 부처 간 이를 공유하고 국가의 안전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일관되게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해양안보위협을 관리할 명확한 주체를 선정하여 대비하자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한국의 해양안보의 주체로는 안보위협사안에 따라 해군, 해양경찰, 관세청, 국토해양부, 법무부, 외교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바 이러한 기능을 하나로 묶어 유사시 총체적으로 국가해양안보를 진담할 주체를 미리 지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평상시부터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해양안보증진을 위한 정책적인 교류활동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주무기관을 선정하기까지는 미국 등 선진국들의 사례를 따라 우선 해양안보를 위해 유용한 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해군이 중심이 되어 대비를 해나가 되, 각 주체들이 소관분야의 해양안보위협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비책을 연구 발전시켜야 나가야 하리라 생각한다.

넷째, 해양안보의 국제적 성격을 감안하여 주변국이나 한국의 해양안보 이해가 걸린 지역의 국가들 나아가 세계차원의 해양안보레짐이나 협약에 주도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국제정치에서 신현실주의의 한 분파인 자유제도주의자인 Keohane과 Martin(1995)에 의하면 “제도는 정보를 제공하고 거래비용을 줄이며, 신뢰를 증진시키고, 조정의 접점을 제공하여 전반적으로 상호성(reciprocity)의 작용을 촉진한다”고 주장한다(John Baylis, p.278). 즉 이러한 국제정치적 이론을 배경으로 한국이 추진할 수 있는 영역이나 틈새는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비용과 인력

이 투입되어야 할 것이나 이를 통해 한국은 해양안보위협의 실체와 대응방안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경제적이라 할 수 있다. 한편으로 한국의 경제활동의 범위가 세계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향후 더욱 심화될 것인 바 한국도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경제규모에 걸 맞는 책임 있는 세계국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당위적인 일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해양안보의 실질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앞에서 언급한 내용을 포함하여 해군력과 해양경찰력을 획기적으로 증강시키는 문제도 포함된다. 세계 10위권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국제무대에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해군/해양경찰의 능력은 많은 제약이 따른다. 함정의 규모, 무기 및 장비, 병력의 수, 해외기지의 확보, 교육 및 훈련 등등 여러 측면에서의 많은 연구와 발전이 요구된다.

V. 결 론

한국은 2009년 현재 국력의 핵심요소인 경제력과 군사력을 기준으로 평가해 볼 때 세계 200여개의 국가들 중 10위권의 부강한 국가이다. 역사적으로 한국이 이처럼 강한 국력을 가져 본적은 없다고 생각한다. 향후 한국이 현재보다 더 강한 세계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미래의 다양한 안보위협을 어떻게 효과적이며 성공적으로 극복해 내고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해양국가가 안보를 확보하고 더욱 발전된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해양으로부터의 위협 즉 해양안보위협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치밀한 대비가 필요하다.

한국의 해양안보위협은 현재도 많이 있지만 한국의 국력의 증가와 국제경제 활동의 범위가 확대되어 감에 따라 향후 보다 증가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한국의 해양안보에 대한 관심을 현재처럼 당연시 하고 소홀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한국의 해양안보를 보다 확고하게 보장 할 수 있겠는가?

먼저 해양안보에 대한 학술적, 이론적 연구를 확대하여 확고한 학문적인 바탕을 마련해야 하며 해양안보에 대한 관심을 현재의 북한으로부터의 위협과 유사한 수준의 국가안보위협으로 생각하고 대비해야 한다. 하나

의 해양안보위협이 발생했을 때 이를 단순한 사건으로 보지 말고 국제적인 안목으로 이를 분석하고 한국의 국가이익을 위하여 전략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해양안보위협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주관부서를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해양안보문제를 관리해야 할 것이며, 해양안보의 국제적 성격을 고려 국제해양안보협력체제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실제적인 정책집행수단인 해군력과 해양경찰력의 획기적 발전도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과 병행하여 한국은 평소부터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해양사상을 국민정신으로 승화하여 국민들의 해양활동을 고무시켜야 할 것이며, 보다 적극적으로 해양안보위협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을 제고하여 평소 국민들의 협조와 관심을 유도함으로써 국가해양활동을 보다 안전하고 활발하게 펼쳐 나가야 하겠다. 이는 한국정부에서 제시한 국가 비전이자 온 국민의 염원이기도 한 '선진화를 통한 세계일류국가'로의 도약을 보장하는 일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1] <http://www.nso.go.kr> : 국가통계포털 (KOSIS).

[2] 국방대학교, “안보관계용어집,” p.12., 2005.

[3] 홍용표, “탈냉전기 한반도 개념의 확대와 한반도 안보 환경의 재조명,” 한국정치학회보 제36집 4호, p.122. 재인용. 2002.

[4] John Baylis, “국제안보와 지구안보,” 이상현 역, 세계정치론 제4판, p.285. 2008.

[5] Webster’s Online Dictionary.

[6] 해양수산부, “해적피해 예방대책,” p.20. 2006.

[7] <http://www.worldbank.org>.

[8] <http://www.nso.go.kr>

[9] <http://www.customs.go.kr>.

[10] 최용석, “해상교통로 차단/봉쇄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해군대학, pp.48~56. 2004.

[11] <http://www.ebn.co.kr>.

[12] 미국은 2005년 발행한 “National strategy for maritime security”에 따라 범 국가적으로 해양안보를 관리 중임.

저자소개

박응수(Eung-Soo Park)



1983년 해군사관학교 (이학사)
1992년 국방대학교(안보학석사)
2009년 충남대 국제정치학 박사과정 수료

1998년 구축함 부함장
1999년 초계함 함장
2008년~ 현재 해군대학 전략학 교수
※ 관심분야: 국제정치, 국가안보, 해양안보, 군사/해양전략

고광섭(Kwang-Soob Ko)



1979년 해군사관학교 (이학사)
1983년 한국해양대학교(공학석사)
1991년 미 클락슨대 전자공학과 (공학박사)

1983년~2006년 해군사관학교 교수
2007년~2008년 해군대학 교수
2009년~현재 해군사관학교 및 해군대학 명예교수
2009년~현재 해군사관학교 강의전담교수
※ 관심분야: 전파/위성항법, 해양통신, 해양안보/무기체계